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박진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제 1기 조성위원을 지냈던 A씨는 요즘처럼 '원년멤버'였다는 사실이 후회스러울 때가 없다. 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가 가시화된 지난 2년 동안 특별히 한 일 없이 허송세월(?)을 보냈다는, 일종의 자책감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가 고의적으로 직무유기를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광주의 미래를 바꿀 대역사(大役事)에 힘을 보탠다는 자긍심에, 누구보다도 의욕이 넘쳤던 사람이 바로 A씨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럴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았다. 말이 대통령 직속 심의기구인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점심 먹고 헤어지는 회의

A씨가 임기 2년간 한 일은 회의 참석이었다. 하지만 회의도 가뭇이 풍나듯 열리는 데다, 특별한 의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 조성위원들이 서로 안부를 묻는데 그치는 '간담회'수준이었다. 별다른 안건도 없이

가녀하게 점심 먹고 헤어지는 회의에 실망해 A씨는 두차례 회의에 나간 뒤부터는 발길을 끊었다. 그가 조성위원으로서 한 일은 회의 두번 참석한 것이 전부였다. 오랫동안 문화관을 누빈 현장경험을 살려 문화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기 조성위원회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두번째 선장을 맡은 송재우 위원장이 작년 말 조성위 직속의 기획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을 김명근 문광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는 취임 당시 송 위원장이 "더 이상 문광부의 틀러리는 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태도가 엿보인다. 이번 시행령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5개 정부 각 부처에 문화중심도시사업 지원팀을 설치해 조성위에 힘을 실

'틀러리 조성위' 이제 안된다

회라도 구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출범한 제2기 조성위원회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두번째 선장을 맡은 송재우 위원장이 작년 말 조성위 직속의 기획단 설치 등을 골자로 한 '문화중심도시 특별법 시행령(안)'을 김명근 문광부 장관에게 제출한 것이다. 이는 취임 당시 송 위원장이 "더 이상 문광부의 틀러리는 서지 않겠다"고 선언한 태도가 엿보인다. 이번 시행령안의 골자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15개 정부 각 부처에 문화중심도시사업 지원팀을 설치해 조성위에 힘을 실

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당시 문화관광부 추진기획단이 '취사선택한' 안건을 심의할 뿐, 그러면 사안이나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조성위원회는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설계와 같은 굵직한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문광부가 내놓은 문화전당 공모당선작으로 연일 지역사회가 들끓었지만 팔짱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문화중심도시 추진방향을 놓고 문광부와 광주시가 대립각을 세울 때도 '점두'를 지키는 것이, 조성위원

어달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조성위 산하에 기획단을 설치해 날개를 달아달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허울뿐인 조성위원회의 위상을 곧추 세워 '일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송 위원장 제안 귀 담아

이 같은 송 위원장의 제안은 그동안 문광부 추진단의 독선과 오만에 염증을 느낀 대다수 지역민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일련의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과정에서 지역 정서와 현실을 무시한 추진단의 '밀어 붙이기'는 정작 문화도시의 주체인 광주시민들을 극도의 소외감에 빠뜨렸기 때문이다. 제1기 조성위원회가 보여준 시행착오를 밟지 않기 위해서, 멀어진 지역민들의 관심을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문광부는 송 위원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만약 종전대로 '누가 뭐래도' 우린 가는 거야"라며 독선을 고집한다면, 지역사회에 견장을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다.

문화수도도 가는 정도(正道)는 다른 데 있지 않다. 열린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것이다. 문화란 밀어붙인다고 되는, 그런 편협된 발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문화생활부장>jhpark@kwangju.co.kr

시설

노 대통령의 개헌론 정략 떠나 논의하라

노무현 대통령이 9일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을 4년 연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론'을 전격 제안하면서 정국에 파란이 일고 있다. 노 대통령은 앞으로 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개헌론 제기의 진정성을 알리고 정치권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다. 정치권은 대선전국 최대의 이슈로 부상한 대통령의 개헌론 제안 배경과 후속조치를 예의주시하며 정치적 계산에 분주하다. 열린우리당은 제안을 환영한 반면 한나라당은 '정략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전문가들의 분석도 엇갈린다. 단손 논리로 보면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일부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 등은 그동안 5년 단임제에 따라 국력 낭비와 일기 말 대통령 신분의 불안정성 등 폐해를 들어 개헌론을 제기해왔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특정 정치세력에 유리하거나 불리할 수도 없는 일이다. 우리가 대통령의 개헌론을 주시하는 것은 사안의 폭발력과 시기의 민감성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대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개헌론을 꺼낸 것은 현재의 대선구도를 흔들기 위한 '국면 돌파용'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정세개편도 추후추진되는 양상이다. 지지도 10%대의 노 대통령이 단순히 정국을 반전시키며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개헌은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국민적 동의도 전제되어야 한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정치적 소모전으로 비화돼 국론분열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국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증폭될 것이 틀림없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정략적 접근'은 당연히 경계해야겠지만 무엇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지방 소상공인 '정부지원' 폐지 재고해야

정부가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내년부터 폐지한다고 한다. 정부는 광주·전남 등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을 지난해 4천억 원에서 올해는 3천500억 원으로 줄인 데 이어 내년부터는 없애기로 한 것이다. 특히 지역신보에 출자하는 자본금도 내년부터 폐지키로 해 소상공인 자금지원 창구인 지역신보의 부실화마저 우려된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은 지역신보 전체 보증액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줄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광주신보와 전남신보를 통해 3천315건에 735억 원이 대출된 것만 봐도 이 자금의 긴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무슨 연유에서 소상공인 자금지원제를 폐지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영세 소상공인은 구조조정

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근로계층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최근에는 경기불황에다 백화점이나 마트 등 대형 유통점에 밀려 고사 직전에 빠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금지원제도마저 없앤다면 영세 소상공인은 실업자 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소상공인 체제는 광주·전남에만 20만 가에 이를 정도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소상공인 업체들이 활성화되지 않고서는 서민의 체감경기는 나아질 수 없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 현상도 영세 소상공인의 몰락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도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 국가경제의 실태와 같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망정 자금줄마저 끊어서야 되겠는가. 차제에 자금지원은 물론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은펜클럽 백강화. 사회나 환경문제에 관심이 있지만 주부라는 한계 때문에 깊이 있는 말을 할 만한 역량은 못 된다. 그렇다고 식구들 이야기 하면 팔발춤 돌리기 쉽고 재미도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번만 꼭 눈 감고 우리 특이한 남편이야기를 조금 하려한다. 그는 소위 첩발통이라는 공무원인데, 전혀 그 물에 어울리지 못하는 기를 같은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좋다면 공무원들이 이미 한 때 처치용 경력이 있다. 종대로 결혼했던 난, 남편도 좋았지만 사실 공무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작용했다는 걸 전혀 부인할 수 없다. 그런데 그걸 그만 두다니 정말 하늘이 노렸다. 남편의 실질 이유는 한 마디로 공무

기고 사리타 동골. 내가 사는 네पाल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으로, 또는 불교국가들 사이에는 부다 탄생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한국과 네팔은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 내가 광주의 의재창작스튜디오 거주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대단히 기쁘다. 끊임없이 창조적 작업을 하여야 하는 나에게 이런 기회는 아주 의미 있는 일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광주에 머무르면서 나는 많은 경험을 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한국의 전통, 광주의 역사에서 한국문화를 배우면서 많은 영감을 얻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눌

無等鼓 부자(富者). '고급 승용차를 타고 부동산 투기를 하며 골프와 명품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로, 존경하지는 않지만 노력은 인정한다.' 얼마전 한 사회의식조사기관이 '부자(富者)'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다.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부자하면 세계 최고의 재산가라는 빌 게이츠도 사회환원에 있어서는 누구 못지 않다. 미국에서 부자들이 존경을 받는 것은 이렇듯 정당하게 돈을 벌고 아끼면서 또 의미있게 쓰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기업인들은 물론이고 임직의 독자가들이 종종 기부와 선행을 하면서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해준다. 중국의 혼란기에 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주인공은 관료지교(管鮑之交)로 유명한 관중(管仲)이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 충분히 소비하면 가난한 사람이 일 자리를 얻는다"면서 민생이 좋지 않을 때 소비를 활발하게 해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자 역할의 중요함과 마음가짐을 경계할 일 없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대중교통 이용시 노인들 배려해 자리양보 해야.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도중 광주시 서구 운전역에서 한 노인이 조그만 손수레를 끌고 탑승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뒤늦게 타는 바람에 손수레를 미쳐 지하철 안으로 끌어들이기도 전에 문이 닫혔고 손수레가 출입문 틈에 끼고 말았다. 문이 다시 열려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어들이려는 했지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노약자석은 빈자리가 없었고 일반 좌석도 승객들이 모두 앉아 있었다. 그 할아버지

어린이 안전 위협하는 책 모서리·책 표지 등 개선돼야. 새해를 맞아 조카들에게 그림동화책 선물 하려고 서점에 갔다. 어린이들을 위한 책이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었다. 2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한 그림책은 대부분 안전을 고려하여 책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 보기에도 좋고 안심되었다. 그러나 2세 이상의 유아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림동화책은 한결같이 책표지가 단단하고 모서리가 뾰족하게 되어 있어 위험하게 보였다. 예전에 TV나 신문에서 어린이를 위한 책에 대해 많이 다루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때도 책 모서리의 뾰족한 부분이 어린이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for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